

[26년 1학기 노사관계이론]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글로벌 전망 · 한국 실태 · 1인 가구 시대의 불평등, 어떻게 해결하는가

2026. 6. 9.(화)

노사관계학과 60기
조민제, 박진우, 나영훈

목차

I.

OECD (2025) : 글로벌 인구변화 · 성장 영향 · 세대 간 불평등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Ch.2, pp.67-104

II.

김유선 (2025) : 한국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다중위기와 노동운동, 제4장 — 압축성장에서 축소사회로

III.

김유선 (2026) :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다중위기와 노동운동 II, 제5장 —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

IV.

종합 토론 · 질의응답

OECD 고용 전망 2025 인구변화 · 성장 · 세대 간 불평등

노사관계학과 60기 조민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 ▶ 1.1 인구 고령화: 현황과 전망
- ▶ 1.2 기준 시나리오: GDP 성장 40% 둔화
- ▶ 1.3 미활용 노동자원 동원의 잠재력
- ▶ 1.4 세대 간 불평등 — 성장 문제를 넘어 형평성 문제로 : 소득·자산·빈곤

1.1 인구 고령화: 현황과 전망

0.72명

한국 합계출산율
(2023, 역대 최저)

52%

2060년 OECD
노년부양비 전망

-8%

OECD 생산가능인구
2060년까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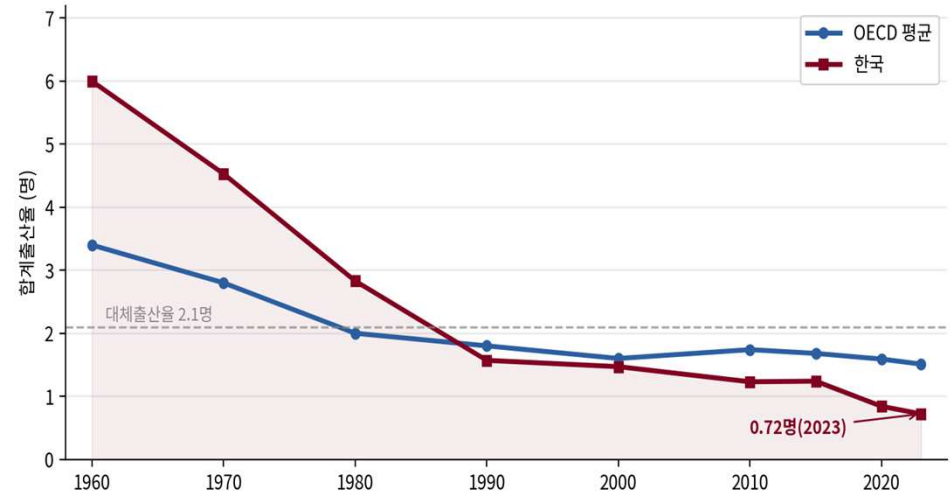
1.5명

OECD 평균
합계출산율

출산율 급락 vs. 기대수명 연장

- ▶ **합계출산율**: 1960년대 중반 3.4명 → 최근 1.5명 (OECD 평균)
- ▶ **한국**: 0.72명(2023), 전 세계 198개국 중 최저, 유일한 1명 미만 국가
- ▶ **기대수명**: 1950년 이후 20년 증가, 60세 건강수명 증가 전체의 70%
- ▶ **UN 중위 시나리오**: 출산율 안정화,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 전망

합계출산율 추이: OECD 평균 vs. 한국



노년부양비와 생산가능인구

- ▶ **노년부양비**: 1980년 19% → 2023년 31% → 2060년 52% **전망**
- ▶ **생산가능인구(20~64세)**: 2060년까지 OECD 전체 8% 감소
- ▶ OECD 국가 1/4+ 이상에서 30%+ 이상 감소 : 한국·동유럽 감소폭 최대
- ▶ **인구 피라미드**: 삼각형 → 마름모 → 역삼각형 급변

⚠ 시기별 부문별 한국 전망(김유선, 2025참조)

- ▶ **취업자 수** : 2027년(2,879만) 정점 후 감소 - 노인 노동력 활용해도 2030년대 본격 감소
- ▶ **학령인구** : 2020~30년대 초등학생 40%+ 감소, 대학생 급감 → 폐원·폐교 현실화
- ▶ 2020년대 총인구 △53만, 2030년대 △125만, 2040년대 △295만, 2050년대 △481만 감소

1.1-2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고 있다

고령사회→초고령사회 7년(프랑스 29년·일본 11년) | 출산율 세계 최저(0.72명) | 2072년 부양비 OECD 최고 — 3관왕

📊 합계출산율 국제 비교 (2021년 기준)

- ▶ 이스라엘 3.0명 (유일한 대체 수준 초과)
- ▶ OECD 평균 : 1.58명
- ▶ 최저권 : 스페인 1.19명, 이탈리아 1.25명, 한국 0.81명
- ▶ 한국은 OECD뿐 아니라 전 세계 198개국 중 최저
- ▶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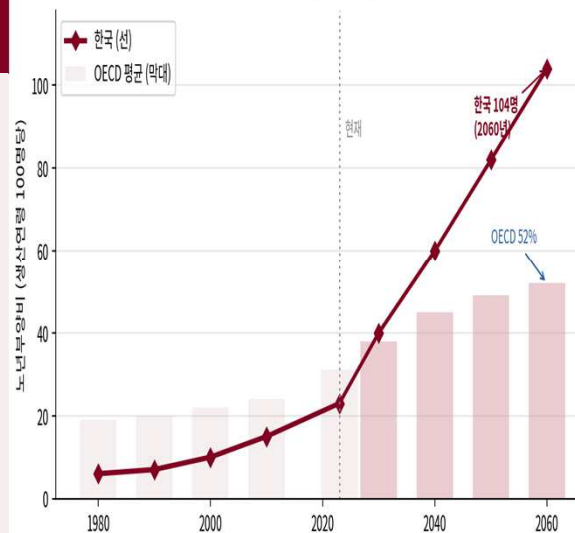
⚡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

- ▶ 고령사회(14%) → 초고령사회(20%) 진입 기간: 프랑스 29년 | 미국 15년 | 일본 11년
한국 7년 (2018→2025) >> 유례없는 속도
- ▶ 기대수명: 1970년 62.3세 → 2020년 83.5세 → 2070년 90.8세 전망
- ▶ 중위연령 : 1970년 21.8세 → 2020년 43.7세 → 2070년 63.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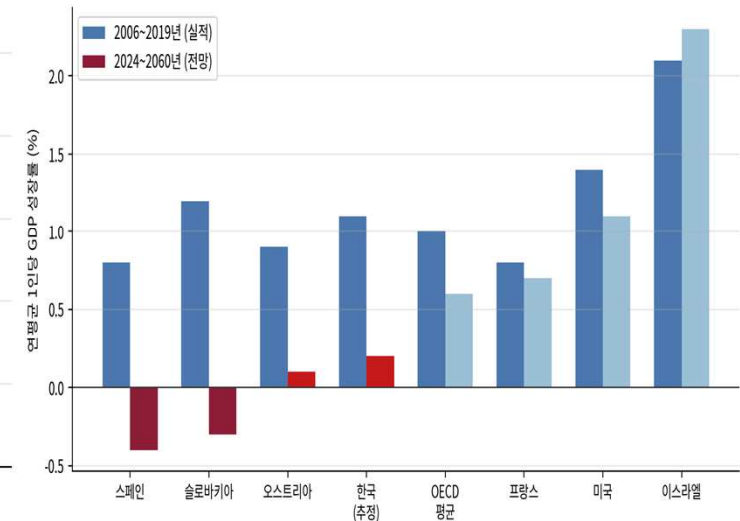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의 시기별 영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 ▶ 단기 : 학령인구·병역자원 급감 — 2020~30년 초등학생 △41.5%, 대학생 △22.3%, 만20세 남성 급감
- ▶ 중기 : 생산연령인구 감소·지역소멸 가속화 — 소멸위험지역 전체 시군구의 49.6%
- ▶ 장기 : 베이비붐 세대 초고령층(75세+) 진입(2030~) → 복지제도 지속가능성 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환(2023년), 국민연금 적자전환(2042년 예정)

노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 (실선=한국, 막대=OECD)



인구 고령화로 인한 1인당 GDP 성장률 변화 전망 (OECD, 2025)



1.2 왜 성장이 둔화되는가 — 메커니즘과 구조적 원인

OECD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를 더 중요한 문제로 본다

▶▶ 정책 없으면 GDP 성장 40% 둔화

고용인구 비율 하락 메커니즘

- ▶ 고령화 → 비취업 고령인구 급증 → 총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하락
- ▶ OECD: 48.1%(2023) → 46.2%(2060), 1.9%p 하락
- ▶ 스페인·슬로바키아공화국: 10%p+ 하락 — 2060년 GDP 14% 손실
- ▶ 노동생산성 성장률 일정 가정 시 → 성장률에 동일 비율 부담

AI·생산성 회복으로 상쇄 가능한가?

- ▶ 생성형 AI 확산으로 생산성 반등 기대 — 그러나 아시아·유럽 대륙은 1990년대 디지털화도 생산성 하락 못 막음
- ▶ 기후변화도 생산성에 추가 하방 압력 (Bilal & Känzig 2024: 기후변화 없었다면 세계 GDP 37% 높았을 것)
- ▶ 시간당 근로시간도 하락 추세 (2005년 이후 OECD 평균 5.5% 감소)
- ▶ 결론 : 생산성 회복만으로 노동투입 감소 단독 상쇄는 불충분 → 미활용 노동자원 동원이 핵심

국가별 성장률 변화 전망

- ▶ 한국·동유럽·룩셈부르크 : 1%p+ 하락 (낙폭 최대)
- ▶ 그리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 : 연평균 마이너스 성장 전망
- ▶ 이스라엘·멕시코·튀르키예 : 예외적으로 고용인구 비율 증가
- ▶ 한국: 2040년대 이후 장기성장률 0%대 진입 위기

고령화가 생산성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개인 수준 : 고령자 생산성 하락 시점은 직종·건강·교직 환경에 따라 다름 — 관리직 전환으로 보완 가능
- ▶ 거시 수준 : 기업 진입·퇴출 감소, 고령 소비 패턴 저성장 서비스 집중, 직업 이동성 감소 → 재배분 효율 저하 | 결론: 인구 감소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 변화





1.2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심각한가 — 국가별 비교

한국: 생산연령인구 2019년 정점(3,763만) → 2070년 1,711만 / 절반 이하로 감소, 낙폭 최상위권

고용인구 비율 하락의 메커니즘

- ▶ ① 출산율 하락 + 기대수명 연장 → 인구 고령화
- ▶ ② 비취업 고령인구 급증 → 총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
- ▶ ③ 노동투입 감소 → 1인당 GDP 성장률 ↓
- ▶ ④ 동시에 연금·의료 지출 증가 → 재정 부담 ↑
- ▶ OECD 전체: 48.1%(2023) → 46.2%(2060) :
→ 1.9%p 하락
- ▶ 스페인·슬로바키아공화국 : 10%p+ 하락 :
→ 연간 성장 거의 정지

국가별 성장 손실 등급

- ▶  심각 (1%p+ 하락): 한국,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 ▶  중간 (0.5~1%p):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핀란드, 스위스
- ▶  경미 (0.25%p-):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 ▶  예외적 증가: 이스라엘, 멕시코, 튀르키예 (고출산·이민 유입)
- ▶ 한국: 2040년대 이후 장기성장률 0%대 진입 위기 (국회예산정책처)

2060년 1인당 GDP 손실 규모 — 기준 vs. 고령화 없을 경우

- ▶ OECD 전체 : 2060년까지 누적 1인당 GDP 14% 손실 : "제때 정책 안 쓰면 경제 규모 14% 작아진다"
- ▶ 한국의 경우 : 생산연령인구 2019년 정점(3,763만) → 2070년 1,711만 (절반 이하) → 성장 손실 더 클 것
- ▶ 노동생산성이 2006~19년 속도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 — AI 낙관론도 아직 실현 불확실
- ▶ 결론 : 한국은 인구 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국가이며,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 전환의 유일한 기회다

1.3 미활용 노동자원 동원의 잠재력

잠재력의 2/3만 달성해도 → 성장 손실 70% 상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0.9% 유지 가능

① 고령 노동자 취업률 제고

- ▶ OECD 상위 10% 수준으로 퇴직률 낮추면 → 절반 국가 성장률 +0.2%p
- ▶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 고령화 성장 손실 완전 상쇄 가능
- ▶ 고령층 성별 격차 동시 해소 시 → OECD 전체 +0.26%p
- ▶ 조건 : 평생학습·연금개혁·연령차별 해소 병행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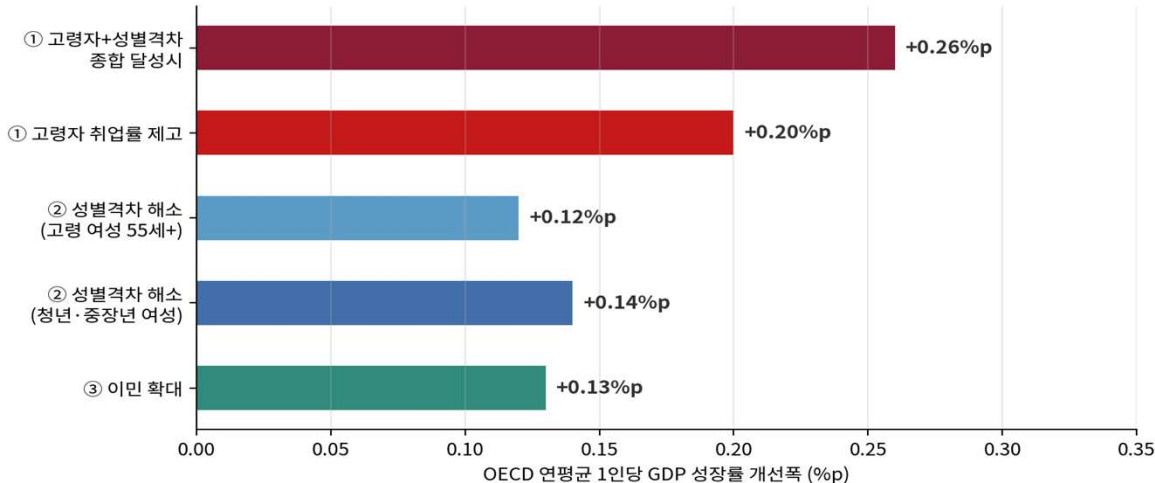
② 성별 고용격차 해소

- ▶ 전 연령 성별 고용격차 해소 → OECD +0.2%p
- ▶ 여성 고용률 낮은 국가(콜롬비아·이탈리아·튀르키예): +0.3~0.6%p
- ▶ 이득의 1/3 이상이 고령 여성(55세+) 격차에서 발생
- ▶ 여성 무급 돌봄 부담 재분배 없이는 달성 어려움

③ 이민 확대

- ▶ 순이민율 0.61%(75분위) 달성 시 → 중위 OECD +0.13%p
- ▶ 남유럽·동유럽에서 효과 상대적으로 큼
- ▶ 통합 정책·언어훈련 등 대규모 투자 필요
- ▶ 단독으로는 게임 체인저 불충분 — 보완 수단으로 활용

미활용 노동자원 동원 경로별 성장 기여 (OECD, 2025)



출산율 지원 정책의 한계

- ▶ 가족 지원·보육 정책은 출산율 부분 설명 >> 하지만 선호 변화·주거·교육 비용 등 다른 요인이 더 큼
- ▶ 출산율 대체 수준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 >> 2060년까지 GDP 기여도 미미 (오히려 어린이 부양 증가)

1.3 고령 노동자 활성화 _ 가장 큰 성장 잠재력

고령자 취업률 제고 = 가장 큰 성장 잠재력 (+0.26%p)

단, 단순 정년 연장이 아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조건이 전제



고령 노동자 취업률 국가 간 격차

- ▶ 60~64세 고용률: 국가별로 최대 4배 차이
- ▶ 65~69세 고용률: 국가별로 최대 7배 차이
- ▶ 한국·일본·아이슬란드: 이미 고령 취업률 높음 → 추가 여지 제한
- ▶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벨기에·그리스: 잠재력 최대
 - 퇴직률을 상위 10% 수준으로 낮추면 성장률 +0.4%p 가능
 -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단독으로 전체 성장 손실 상쇄



60세 건강수명 증가 > 더 일할 수 있다

- ▶ 60세 기준 건강수명 증가분이 전체 기대수명 증가의 70%
- ▶ "더 오래 살면서 더 건강해졌다" >> 노동시장 참여 연장의 객관적 기반
- ▶ 그러나 고용률은 건강수명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함
- ▶ 핵심 장벽: 연령 차별, 기술 격차, 연금 조기 퇴직 유인
- ▶ 보건·복지서비스 취업자: 2022년 271만 → 2032년 371만 (+100만)
- ▶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



필요한 정책 패키지 (OECD 권고)

- ① 연금제도: 조기 퇴직 유인 제거, 유연한 점진적 은퇴 허용
- ② 평생 학습: 중·고령 노동자 재훈련 투자 — "50대가 60대 노동시장의 결정 요인" (OECD Ch.3)
- ③ 고용주 태도: 연령 차별 금지 강화, 직무 재설계, 유연 근무 확대
- ④ 건강 정책: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취업 장벽 제거
- ⑤ 한국 특수 과제: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50대 초반) 관행 개혁 —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
 - ⚠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건강권·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단순 정년 연장이 목표가 될 수 없다

1.4 세대 간 불평등: 소득 · 자산 · 빈곤

인구 변화는 성장 문제를 넘어 자산 중심 성장체제가 만들어낸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소득 격차 확대

- ▶ OECD 2/3+ 국가에서 55~64세 vs. 25~34세 격차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
- ▶ 밀레니얼: 20~30대 소득 성장 정체 — 금융위기 상처 효과
- ▶ 일부국가(룩셈부르크·이탈리아·노르웨이)는 고령층 소득 \geq 청년층



자산 격차 심화

- ▶ 55~65세·65세+ 순자산 중앙값 = 25~34세의 6배
- ▶ 주택 자산이 국가 부의 95% → 저렴할 때 구매한 고령층에 집중
- ▶ 30대 자가 보유율: 24개국 중 17개국에서 30년간 감소



빈곤 위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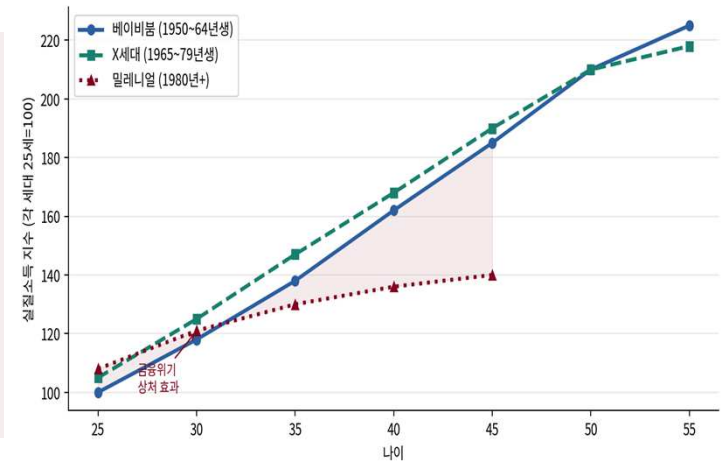
- 노인 빈곤율: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국가서 감소
- 32개국 중 18개국에서 고령층
- 빈곤율 < 아동 빈곤율
- 주거비 미포함 지표는 세대 간 격차 과소평가



세대 형평성 딜레마와 노동운동 함의

- ▶ 공공 사회지출 : 연금+의료 비중 68%, 매년 GDP 대비 0.09%p씩 증가 전망 → 청년 대상 지출 여력 감소
- ▶ 고령층 미활성화 시 더 적은 생산가능인구가 더 많은 부양인구 지탱 → 청년 부담 전가 + 세대 갈등 심화
- ▶ 노동운동 과제 : 단순 임금·고용을 넘어 세대 간 연대·공정한 전환 비용 분담 의제화 | 이는 단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자산 중심 성장체제의 구조적 결과이기도 하다

세대별 생애 소득 격차 비교 (OECD, 2025 기반)



25~34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 ▶ 25~34세 가구는 65세+ 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의 14%p 더 주거비 지출 (OECD, 2025)



1.4 세대 간 불평등: 소득 · 자산 · 빈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활황기 수혜 → 밀레니얼은 금융위기·생산성 둔화의 이중 피해 > 세대 간 격차 구조화

세대별 소득 궤적 > 베이비붐 vs. 밀레니얼

- ▶ 베이비붐 세대(1950~64년생): 20대~50대 중반 급격한 소득 상승
 - 1980~90년대 높은 노동생산성 성장 덕분
 - 은퇴 후에도 30대 소득 수준 유지 (연금+저축)
- ▶ X세대(1965~79년생): 베이비붐보다 같은 나이에 더 높은 소득
- ▶ 밀레니얼(1980년 이후): 20~30대 소득 성장 정체·아예 없는 경우도 → 금융위기 첫 취업 → 저임금 고착 → 자산 형성 실패
- ▶ 이탈리아·스페인: 각 세대 실질 소득이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낮음

두 가지 구조적 원인 (OECD 분석)

- ▶ ① 노동생산성 성장 둔화 (2000년대 이후)
 - GFC 이후 서유럽·남유럽 특히 심각. AI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성 통계는 아직 반영 없음. 밀레니얼이 커리어 전체에서 낮은 성장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 ▶ ② 경기침체의 상처(Scarring) 효과
 - GFC 시기 첫 취업자 → 낮은 출발 임금 → 영구적 임금 격차
 - 유로존 위기로 서유럽 밀레니얼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 고통

자산 격차의 고착화 >> 주택이 핵심

- ▶ 24개국 중 17개국에서 30대 자가 보유율 30년간 감소 — 아일랜드·그리스·영국·스페인·호주 15%p+ 하락
- ▶ 상속·증여는 점점 늦게 도달 → 주택 구매 절실할 때는 이미 기회 상실, 중년에 자산 더하기 역할만
- ▶ 25~34세 가구: 65세+ 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의 14%p를 주거비에 더 지출 (월세 부담)
- ▶ 한국 연결: 1인 가구 월세 비율 40.6% — 청년 자산 형성 차단의 구체적 현실 → 다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축소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실태를 확인한다

1.5 결론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 기대수명 증가는 계속되고 출산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노동투입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아니라 성장 둔화 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 AI와 자동화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지만 생산성 회복 여부는 불확실하다.
- OECD는 생산성 증가만으로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미활용 노동자원의 동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다

- OECD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1. 여성 고용 확대 2. 건강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3. 이민의 보완적 활용.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가장 큰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 간 불평등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최근 수십 년 동안 고령층은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 반면 청년층은 소득 증가 둔화와 주거비 부담,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 인구 변화는 성장 문제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OECD의 최종 결론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고령자와 여성 등 미활용 노동자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 압축성장에서 축소사회로

노사관계학과 60기 박진우

1.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2. 저출산의 원인 진단
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1.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0.72명

합계출산율 2023
(역대 최저)

5,184만

2020년 인구 정점

3,622만

2072년 예상 인구
(정점 대비 70%)

104.2명

2072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 100명당)



초저출산의 가속화

- ▶ 1970년 4.53명 → 1983년 대체출산율(2.1명) 미달 → 2002년~ 초저출산(1.3명 이하)
- ▶ 2018년 1명 이하, 2023년 0.72명 — 전 세계 198개국 중 최저 (OECD 평균 1.5명)
- ▶ 통계청: 2025년(0.65명) 저점 후 2036년 이후도 1.02~1.08명 선 유지 전망
- ▶ 1971년 출생아 102만 → 2024년 22만 → 2057년 이후 16만 명 선



총인구·고령화·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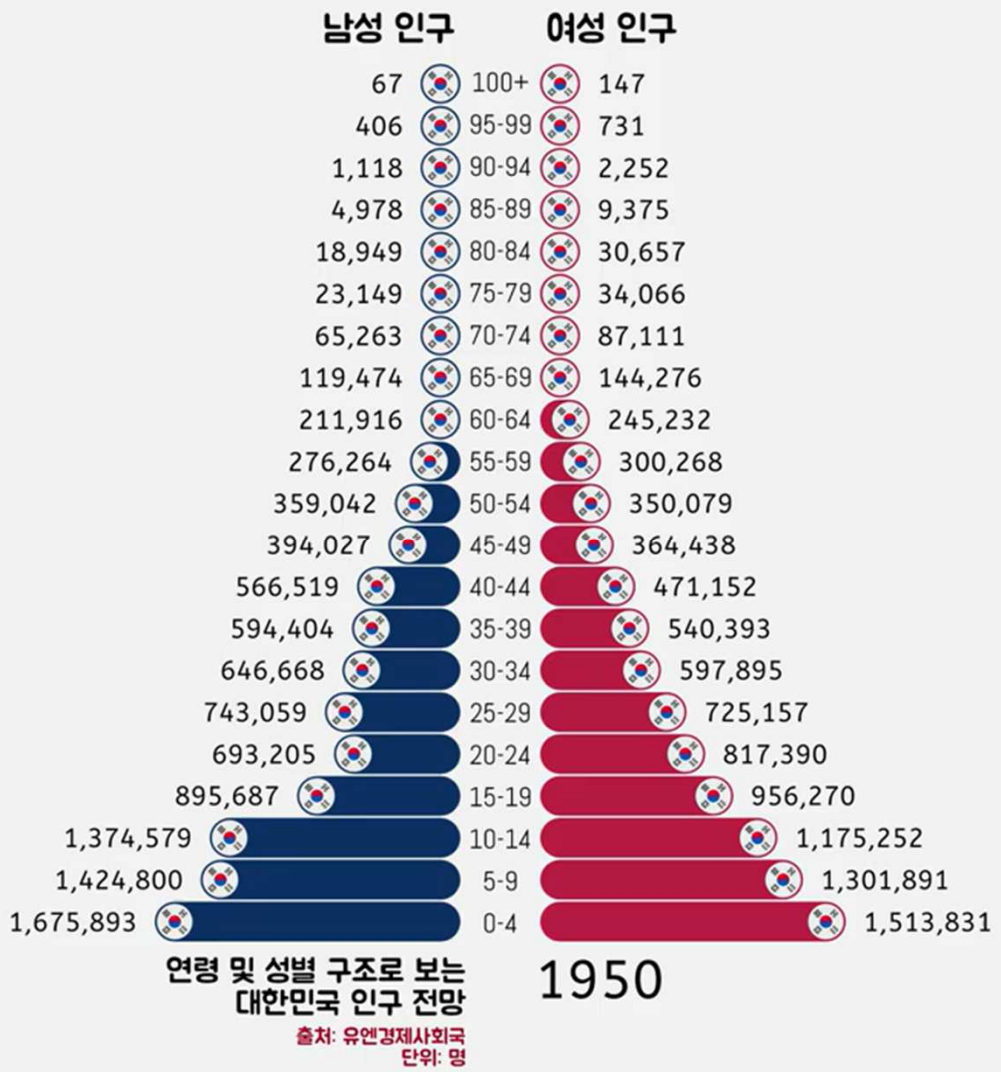
- ▶ 2020년(5,184만) 정점 → 2072년 3,622만으로 감소
- ▶ 2020년부터 출생아 < 사망자, 인구 자연감소
- ▶ 2018년 고령사회 → 2025년 초고령사회(7년, 프랑스 29년·일본 11년)
- ▶ 노년부양비: 1960년 5.3명 → 2072년 104.2명
- ▶ 총부양비: 2022년 OECD 최저(40.6명) → 2072년 OECD 최고(118.5명) 전망



시기별 부문별 변화 전망 (김유선, 2025)

- ▶ 생산연령인구: 2020년대 △321만, 2030년대 △514만, 2040년대 △458만명 감소
- ▶ 취업자 수: 2027년(2,879만) 정점 후 감소 — 노인 노동력 활용해도 2030년대 본격 감소
- ▶ 만 20세 남성: 1991년 48만 → 2024년 26만 → 2044년 12만명 — 남성 징병제 유지 어려워 짐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2022년 271만 → 2032년 371만 (+100만)
- ▶ 인구 피라미드 : 1960년대 삼각형 → 2020년대 마름모 → 2050년대 역삼각형





2. 저출산 원인의 다각적 진단

"저출산은 복합적 사회현상 - 단일 정책으로 해결 불가, 사회경제 구조 전환이 핵심"

저출산 원인 - 주요 기관·연구자 진단 비교

- ▶ ① 정부(2020) : 사회경제적 요인(고용불안·주거·교육경쟁·성차별적 노동시장) + 문화·인구학적 요인
- ▶ ② 한국은행(2023): "청년 경쟁압력 + 고용·주거·양육 불안" → 결혼·출산 연기·포기
- ▶ 실증: 청년고용률 ↑ → TFR ↑ (+0.113***), 주택가격 ↑ → TFR ↓ (-0.042***)
- ▶ 도시 인구집중도 완화 효과가 시나리오 중 최대 (+0.414)
- ▶ ③ 이상민·박동열(2024): 노동시장 이중구조·성차별 + 소진(Burn-out) + 프랑스와 비교
- ▶ ④ 김유선(2016):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안정·고소득 일자리 없으면 혼인 안 함
→ 청년에게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 없으면 저출산 정책 실효성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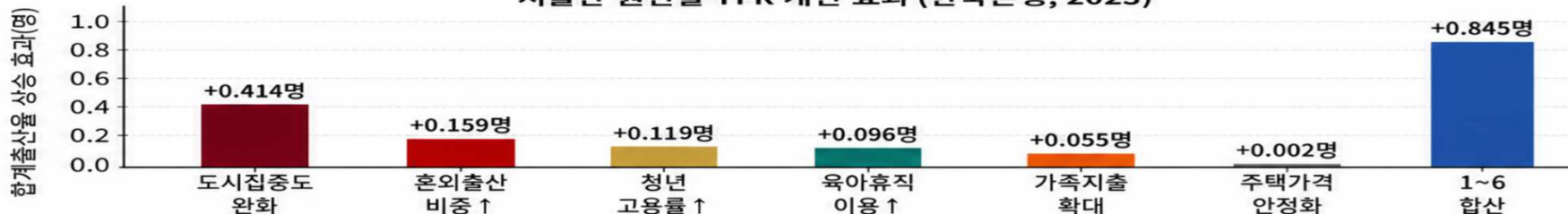
새로운 해석들

- ▶ 소진(burn-out) : 집값·취업·관계 장벽이 개인 감당 범위 초과
- ▶ 합리적 선택 : 자녀 양육 → 노후 빈곤 연결 고리 → 비혼이 합리적
- ▶ 높은 밀도 적응: 수도권 과밀 → 재생산 본능 억제
- ▶ 1인 가구화 : 비혼·만혼 → 1인 가구 증가 → 출산율 추가 하락
- ▶ 정치적 선택 누적: 체제 변화 없이 반전 어려움
- ▶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압도하는 경쟁사회

한국은행(2023) 시나리오 분석 - 최선의 경우에도 대체출산율 불가

- ▶ 시나리오 1~6 동시 달성 시 합계출산율 +0.845명 → 0.72+0.845=1.57명 (대체율 2.1명에 크게 미달)
- ▶ 효과 큰 시나리오: 도시집중도 완화 +0.414(장기 구조 과제), 혼외출산 확대 +0.159(사회규범 변화)
- ▶ 보완수치: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 +0.055,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 확대 +0.096
- ▶ 효과 작은 시나리오: 주택가격 2015년 수준 복귀 +0.002 → "집값 잡아도 출산율은 거의 안 변해"
- ▶ 결론: 한국 사회에서 인구감소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불가피한 현실 — 완화보다 적응·구조개혁 병행 필수

저출산 원인별 TFR 개선 효과 (한국은행, 2023)



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성장·재정·교육·국방·노동·지역·세대 —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연쇄 충격

경제·재정 영향

- ▶ 잠재성장률 : 2026~2035년 0.4%, 2040년대 이후 0%대 성장
- ▶ 한국은행 :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확률 68%
- ▶ 2015~23년 : 1차 베이비붐 은퇴로 성장률 연 $\Delta 0.33\%p$
- ▶ 2024~34년 : 2차 베이비붐 은퇴로 $\Delta 0.38\sim 0.16\%p$ 추가
- ▶ 국가채무 : GDP 대비 49.2%(2022) \rightarrow 192.6%(2072)
- ▶ 건강보험 적자 전환(2023), 국민연금 적자 예상(2042)

사회·교육·국방 충격

- ▶ 초등학생 : 2020~2030년 : 41.5%
- ▶ 대학생 : 2020~2030년 : 22.3%
- ▶ 폐원·폐교·대학 미충원 현실화
- ▶ 만 20세 남성 : 1991년 48만 명 \rightarrow 2044년 12만 명
- ▶ 기존 징병제 유지 압박
- ▶ 소멸위험지역 : 전체 시군구의 49.6%
- ▶ 노인빈곤율 38.9%, OECD 평균 13.5%

노동시장 구조 변화

- ▶ 취업자 : 2027년 2,879만 명 정점 \rightarrow 2070년 1,864만 명 전망
- ▶ 생산연령인구(15~64세) : 매년 30~50만 명 감소
- ▶ 2023년 65세 이상 고용률 37.3%
- ▶ 고령화가 가계소득 불평등 상승의 30% 기여
- ▶ 성장만으로는 인구감소 해결 불가
- ▶ 인구감소는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

노동운동 관점 — 인구감소가 자동으로 교섭력 강화로 이어지는가?

- ▶ 긍정론 : 노동공급 감소 \rightarrow 희소성 증가 \rightarrow 일부 부문 임금·교섭력 강화
- ▶ 부정론 : 소비수요·노동수요도 함께 감소 \rightarrow 수급 불균형 발생
- ▶ 경기침체와 인구감소가 겹치면 노동자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 가능
- \rightarrow 노동운동 과제 : 사업장 단위 교섭을 넘어 사회적 교섭과 초기업 연대로 대응

4.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계와 3축 대응의 필요

① 완화 정책

- ▶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 (2019년 GDP 1.37% → OECD 평균 2.2% 수준 참고)
- ▶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남성·중소기업 노동자 육아휴직 이용 확대 등)
-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아이 중심 지원체계 전환
- ▶ 현금지원보다 보육·돌봄·서비스 인프라 강화

② 적응 정책

- ▶ 여성·고령자·이주노동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축소, 지역소멸에 대한 선제 대응
- ▶ 고령자의료·돌봄 서비스 공급 확충
- ▶ 축소사회에 맞는 지역경제·생활권 재설계

③ 구조개혁

-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 ▶ 주거부담 완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
- ▶ 교육경쟁 완화와 일·생활 조화 회복
- ▶ 분절적 지원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넘어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완화·적응·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4-1.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 프랑스와 한국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

FR 프랑스 모델 - 무엇이 핵심인가?

- ▶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정책보다 삶의 질 보장에 초점
- ▶ 출산·보육·고용·주거·복지·교육·보건·의료 포괄하는 통합 접근
-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 ▶ 공교육 수준의 유아교육·돌봄 체계 강화
- ▶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안정 정책
- ▶ 일·가정 양립,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

KR 한국 정책의 한계

- ▶ 과거 정책은 임신·출산·보육료·육아휴직 등 지원 중심
- ▶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한 선제적·근본적 대비 부족
- ▶ 정책 효과성 분석 없이 분절적으로 지원되어 체감도 저하
- ▶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조율과 추진이 미흡
- ▶ 구조적 원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교육경쟁, 일·생활 갈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

구조개혁 의제

-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청년 고용 안정
- ▶ 주거 안정: 공공임대 확대, 사회주택청 등 공공성 강화 논의
- ▶ 교육개혁: 교육 경쟁 완화와 공교육·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 지역균형 발전과 축소사회 적응 전략
- ▶ Myrdal 부부(1934): 생활수준 하락을 감수하라고 하면서 출산을 요구할 수는 없음
- ▶ Mallach(2023): 인구감소는 해결보다 관리의 대상

1인 가구,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이 되다

홀로 선 대한민국 :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노사관계학과 60기 나영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1. 1인 가구: 새로운 표준의 등장
2. 불안정한 삶의 기반과 빈곤
3.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4. 불평등 기여도 + 2050년 전망

1. 1인 가구의 대중화: 예외에서 표준으로

30%

2024년 1인 가구 비율
가장 지배적인 가구 형태

중년 남성

새로운 최대 유형
4050대 급부상

76.5%

2050년 1~2인 가구
4가구 중 3가구

"1인 가구는 더 이상 취약한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Standard)이다. 전통적 4인 가구 중심 노동시장 제도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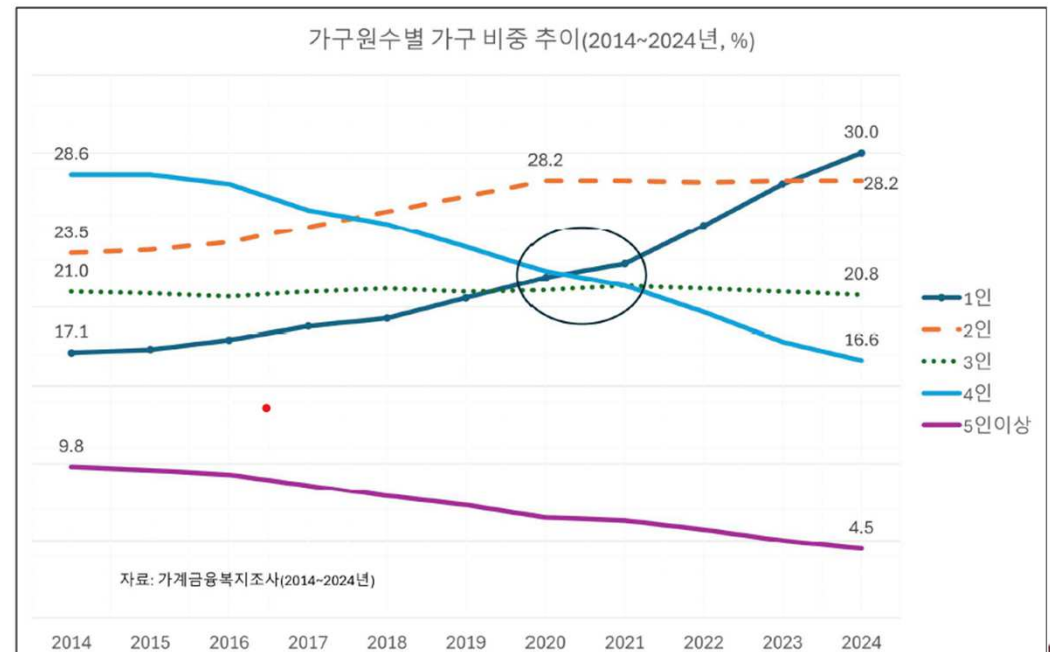


10년간의 구조 전환

- ▶ 1인 가구 : 17.1% → 30.0%
- ▶ 4인 가구 : 28.6% → 16.6%
- ▶ 중심 유형 :
(2014) 독거 노인 여성 34.9%
→ (2024) 중년 남성 35.1%

※ (1인 가구 한정)

○ 사별(27.9%) → 미혼(비혼, 만혼 /)



2. 고이질성 집단: 불안정 노동과 저소득의 집중

"1인 가구는 단일 집단이 아니다. 청년 고시원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 1인 가구가 동일 범주에 공존하는 고이질적(High-heterogeneity) 집단이다."

37.7%

상용직 비율
(4인 가구 64.8%)

32.3%

무직·비경활
(4인 가구의 5배)

77.0%

소득 하위 40%
집중 비율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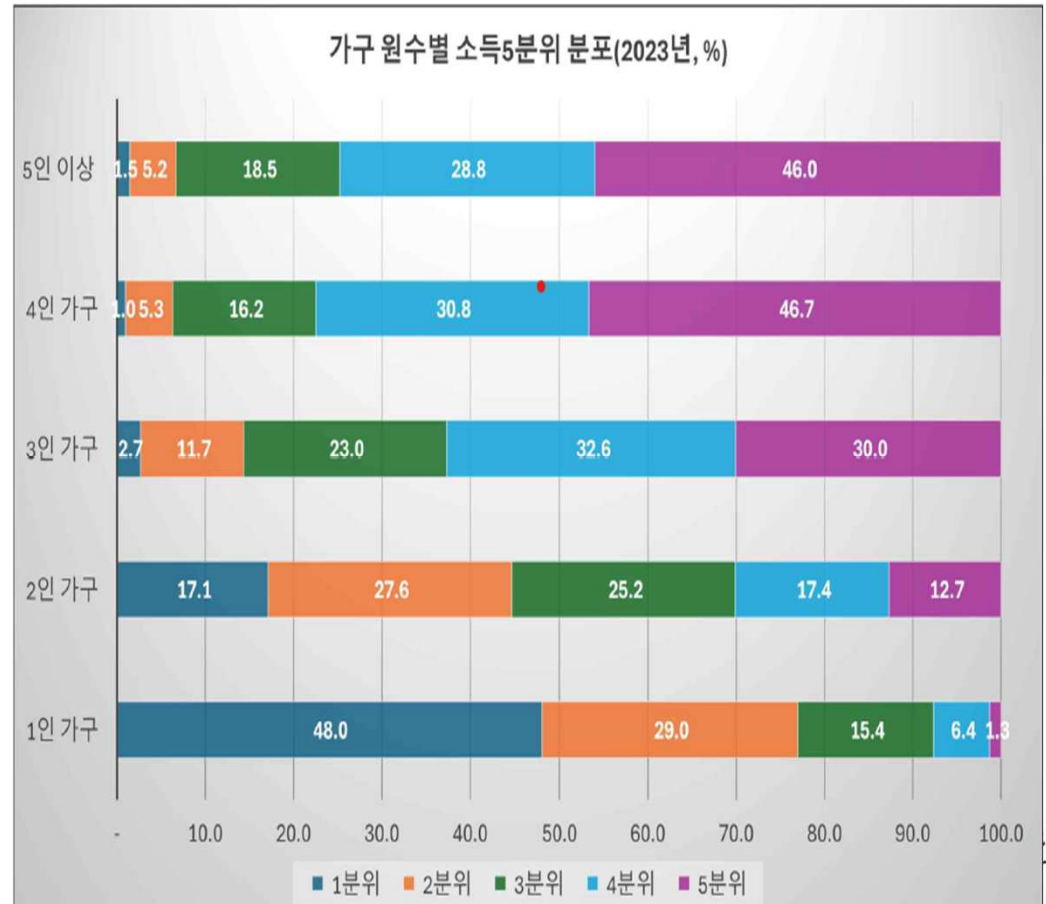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
(10명 중 4명)

노동형태 비교 — 1인 vs 4인가구

- ▶ 상용직: 1인 37.7% vs. 4인 64.8% (**27%p 격차**)
- ▶ 임시·일용: 1인 15.2% vs. 4인 6.1% (**2.5배**)
- ▶ 무직·비경활: 1인 32.3% vs. 4인 6.7% (**5배**)
→ 구조적 노동시장 배제, 개인 능력 문제 아님
- ▶ 소득 중위값: 1인 2,600만 vs. 4인 1억 183만 (**4배**)
- ▶ 중년 남성 1인 가구도 61.5%가 소득 하위 40%

지니계수 — 모든 가구 유형 중 최고

- ▶ 시장소득 지니 : (1인) 0.496 vs (4인) 0.321
 - ▶ 가처분소득 지니 : (1인) 0.376 vs (4인) 0.280
 - ▶ 자산 지니계수: (1인) 0.656 (부동산 0.819)
→ 극빈층과 고자산층이 공존 — 고이질성 실체
- ※ 왜 고이질적인가?
- ▶ 독거 노인 빈곤층 + 청년 자산가 + 중년 이혼남
 - ▶ 동일 통계 범주에 묶여 있어 정책 타깃 분리 필요



3.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 악순환의 구조

1인 가구 내부 자산 격차(P90/P10) 99.8배 — 동일 가구 유형 내 극단적 자산 양극화 상태

40.6%

월세 거주 비율
매달 주거비 구조적 페널티

32.5%

자가 보유율
4인 가구 73.9%의 절반

99.8배

자산 P90/P10
4인 가구 11.1배

주거 형태와 악순환 구조 (2024년)

- ▶ 월세 : (1인) 40.6% vs (4인) 11.2% : 3.6배
- ▶ 자가 : (1인) 32.5% vs (4인) 73.9% : 절반 이하
- ▶ 비아파트(단독·연립·기타): 1인 67.4%
- ▶ 구조적 악순환
- ▶ 월세 → 저축 불가 → 자산 형성 실패 → 주거 상승 혜택 소외
- ▶ 25~34세: 65세+ 대비 14%p 더 주거비 지출
- ▶ 자가 없으면 자산 증식 경로 자체가 차단됨

자산 격차의 실체 (p90/p10=99.8배)

- ▶ 자산 하위 40%: (1인) 71.7% vs (4인) 15.7%
- ▶ 자산 중위값: (1인) 9,584만 vs (4인) 5억 5,880만 : 6배
- ▶ 자산 P10(하위 10%) : 1인 500만원
- ▶ 자산 P90(상위 10%) : 1인 4억 9,910만원
- ▶ P90/P10=99.8배가 뜻하는 것
- ▶ 동일 "1인 가구" 범주에 자산 500만원과 5억원이 공존 → 정책 단일화 불가, 집단 내 분절 대응 필요

4. 한국 불평등 구조의 대전환: 가구 구조라는 새로운 축

"과거 한국의 불평등이 학력·성별·연령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가구 구조 자체가 새로운 불평등 축이다."



패널 고정효과 분석 — 구조적 페널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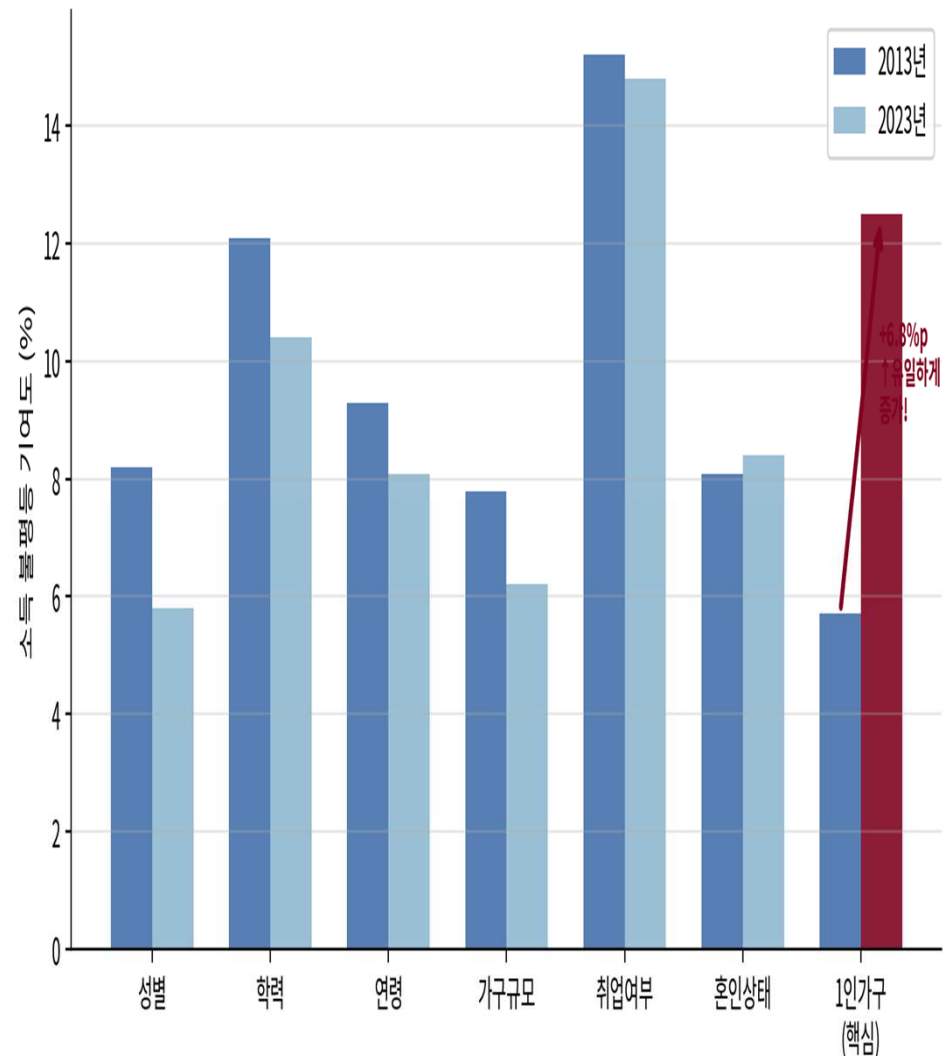
- ▶ 방법: 동일 개인 장기 추적 → 개인 능력·배경 통제
- ▶ "1인 가구가 되는 사건" 자체의 순수 충격 측정
- ▶ 소득 충격: 가구소득 -37.4%
- ▶ (균등화 소득도 -10.1% — 가구원 수 제거 후)
- ▶ 자산 충격: 가구 자산 -32.3%
- ▶ (이혼·사별·청년 독립 — 원인 무관하게 동일)
- ▶ 1인 가구의 빈곤 = 개인의 무능이 아닌
- ▶ 가구 구조 변화에 완충 지대 없는 사회적 실패
- ▶ 즉, 1인 가구 형태 자체가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라 노동시장 불안정·주거 불안이 "1인 가구화"를 통해 극단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 (낙인 효과 주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 10년 변화

- ▶ 성별, 학력, 연령 등 전통적 불평등 요소 기여도 : 감소 ↓
- ▶ **1인 가구 기여도** : 5.7%(2013) → 12.5%(2023)
→ 유일하게 2배 이상 폭증 ↑ ↑
- ▶ **소득 페널티** : -24.7% → -35.2%
- * 2인 이상 가구 대비 소득이 낮은 정도
- ※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가 '가구 구조'라는 새로운 요인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

소득 불평등 요인별 기여도 변화 (2013→2023년)



5. 2050년, 다가올 미래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2041년까지 증가 — 소가구화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41.2%

2050년 1인 가구
비율

76.5%

1~2인 가구 합산
(4가구 중 3가구)

50.0%

65세+ 가구주
비율

50.7%

고령 1인 가구
비율



가구 구조 전망 (2020→2050년)

- ▶ 1인 가구 : 31.2% → 41.2%
- ▶ 2인 가구 : 28.0% → 35.3%
- ▶ 4인 가구 : 15.8% → 6.9% (전통 가족 급감)
- ▶ 65세+ 가구주 : 22.4% → 50.0%
→ 전체 가구의 절반이 노인 가구주
- ▶ 고령 1인 가구 : 25.0% → 50.7%
→ 사회적 고립·빈곤 문제 폭발적 증가
- ▶ 여성 가구주 : 32.4% → 41.2%
- ▶ 미혼 가구주 : 19.6% → 31.4%
- ▶ 부부 가구 : 60.7% → 44.2% (전통 가족 해체)



슬라이드 4~7 분석 결과와 연결

- ▶ 지금까지 확인한 1인 가구의 구조적 불평등 —
- ▶ 소득 -37.4%, 자산 -32.3%의 충격,
- ▶ 불평등 기여도 5.7% → 12.5%
→ 이 구조가 2050년까지 계속 커진다
- ▶ 1인 가구 비율 41.2%가 된다는 것은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이 사회 전체를 더 강하게 재편한다는 의미
- ▶ 1인 가구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불가역적 상수



6. 소결

전통적인 4인 가구 중심의 사회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분석 결과 요약

- ▶ 1인 가구 = 불평등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동인
- ▶ 빈곤율 40.6% — 10명 중 4명 빈곤
- ▶ 지니계수 : 모든 가구 유형 중 최고
- ▶ 1인 가구가 되는 사건 자체의 충격
: 소득 -37.4% 자산 -32.3%
- ▶ (개인 능력·배경과 무관하게 발생)
- ▶ 소득 불평등 기여도 : 5.7% → 12.5%
→ 불평등의 결과이자, 새로운 동력

정책 함의

- ▶ 생애 전환기 경제적 충격 완화
- 청년의 독립, 중장년의 이혼, 노년의 사별
- ▶ 불안정한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 ▶ 1인 가구의 불안정성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

결론 :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이 커지고 있는 지금

- ▶ 1인가구는 다인 가구 대비 고용, 소득, 자산 등 전반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내,외부적 경제 격차 심각)
- ▶ 1인가구의 증가는 불평등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동력

→ 전통적인 4인 가구 중심의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함.

Q1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 속에서 OECD가 권고하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기’는 가능한가?

Q2

20년간 280조원을 써도 출산율이 떨어졌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Q3

노동조합의 주된 복지는 여전히 다인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